

제5회 국제인권심포지엄
The 5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ymposium

혐오표현의 확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해외 사례로 보는 제도적 대안
How to Respond to the Spread of Hate Speech?
- Institutional Countermeasures Learning from International Cases

Session 1

혐오표현의 국내외 현황과 관련 제도
Current Contours of Hate Speech and Regulations

토론자 | Discussant

이수연 Soo-yeon Lee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Senior Research Fellow,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제도적 대응방안

1. 서론

여성혐오 현상은 우리나라에서 1994년 군가산점 제도에 대한 논란 등 온라인 성별 논쟁을 계기로 주목을 받게 되었고, 이후에 온라인 활성화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여성혐오는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외국인, 동성애자와 같은 소수집단에 대한 혐오 중의 하나¹⁾로 여성에 대한 비하 및 대상화와 같은 극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성차별적 의견이나 주장과 구분된다.

온라인의 발달과 함께 혐오표현 현상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반드시 여성혐오표현뿐만 아니라 지역, 이념 등이 다른 집단에 대한 혐오와 공격이 온라인을 오염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 뿐만 아니라 잡지 등 오프라인 매체, 그리고 대면 상황에서까지 여성혐오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여성혐오표현을 의식, 무의적으로 일상적으로 사용하며 혐오표현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 발견되는 여성혐오표현은 혐오의 수위가 높을뿐더러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언어표현의 범주를 벗어나고 있고, 이는 온라인 공간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에게 심리적 손상을 입힐 뿐 아니라 이들의 사회적 자아를 훼손하고 있다. 또한 이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온라인의 논의에 참여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기 어렵게 한다. 모든 혐오표현은 표현이 대상이 되는 집단 뿐에게만 아니라 사회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해악이다. 더구나 여성혐오표현은 여성의 정체성 자체를 공격함으로써 여성에게 심각한 심리적 영향과 함께 나아가 남녀관계를 왜곡시키고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남성에게도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여성혐오표현의 부정적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혐오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적절히 처벌하여 여성혐오표현을 금지하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여성혐오표현에 대해 적극적이고 제도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우리사회에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의 제·개정 방안과 인터넷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플랫폼에서 여성혐오표현 해소를 위해 자체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자율규제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여성은 수적으로 소수집단은 아니지만 권력이나 자원의 배분에 있어서는 남성에 비해 열세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2. 여성혐오표현의 정의와 사례

가. 정의

여성혐오표현은 "여성을 비하하고 성적 대상화하며 종속시키는 표현"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이는 매우 포괄적인 정의이다. 그래서 규제를 목적으로 여성혐오표현을 정의할 때에는 혐오의 경중 및 규제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구체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유형화는 혐오표현에서 드러나는 혐오의 경중에 따라 규제의 여부, 혹은 경중을 정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혐오표현의 경중을 나누는 것은 언어 의미의 다중성과 개인마다의 주관적 생각의 차이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모욕하거나 비방, 욕설을 하는 정도가 심하지" 않은지, "사회통념상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포함되는 정도" 인지 혹은 "차별과 혐오를 의도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의 표현행위"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모든 구성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기가 실제로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는 사례별로 달라져서 원칙으로 기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규제의 대상이 되는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명료하고 간결한 정의가 필요하다. 앞의 정의들은 규제의 대상이 되는 혐오표현을 '폭력의 선동'을 공통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히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폭력'과 '선동'은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형사적 규제의 대상이 되는 혐오표현은 "여성에 대한 폭력의 위협이나 선동을 통해 여성을 비하하고 성적 대상화하며 종속시키는 표현"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 외의 혐오표현은 의견의 표시와 비하·모욕을 표현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물론 단순한 의견의 표시와 비하·모욕의 차이도 때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의견 차원의 혐오표현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성별고정관념에 근거하여 상대 성에 대해 비판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을 잘 수행하지 않는 여성들에 대한 비판, 여성정책과 여성가족부에 대한 적대감도 여기에 속할 수 있다. 그런데 '김치녀'같은 단어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폭력성을 표현하지 않지만 그 뒤에 한국여성 전체를 비하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뒤에 숨어있는 함의(connotation)에 근거한 기준은 불안정하며 논란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김치녀를 사용하는 사람은 비하적 의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형사적 처벌의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실제로 어렵다. 따라서 명확한 표현(denotation)이 있지 않는 한 여성혐오표현은 의견에 속할 수 밖에 없다.

비하와 모욕은 여성을 대상화하고 특히 성적으로 비하하며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를 말한다. 심한 욕설이나 멸시의 언어를 쓰는 것도 포함된다. 대체로 의견 차원의 혐오표현이 교육적 교정의 대상이라면 이 차원의 혐오표현은 민법적 명예훼손이나 모욕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김치녀나 맘충 같은 정형적인 혐오단어는 유행어처럼 넓게 쓰이기 때문에 소송의 대상이 되기는 힘들고 교육에 의해 그 뜻을 이해시킴으로써 자발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단, 이러한 단어들이 모욕적, 선동적 표현과 같이 쓰일 때는 혐오의 정도가 가중된다고 하겠다.

의견에 해당되는 혐오표현은 성별고정관념에 근거하여 상대 여성을 비난·비판하는 것이다. 비하와 모욕은 여성을 대상화하고 특히 성적으로 비하하며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하며, 심한 욕설이나 멸시의 언어를 포함하기도 한다. 대체로 의견에 해당되는 혐오표현이 교육의 대상이라면 비하·모욕에 해당되는 혐오표현은 민법적 명예훼손이나 모욕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단어들이 선동적 표현과 같이 쓰일 때는 혐오의 정도가 가중될 수 있다. 여기서 형사적 규제의 대상이 되는

혐오표현은 “여성에 대한 폭력의 위협이나 선동을 통해 여성을 비하하고 성적 대상화하며 종속시키는 표현”으로 폭력적 및 선동적 단어를 포함하여야 한다.

=

나. 여성혐오표현의 구체적 사례

1) 의견에 해당되는 혐오표현

의견에 해당되는 혐오표현은 여성·여성운동·여성정책(여가부) 등에 대한 혐오의 감정과 한남충, 할애피미, 김치녀, 스시녀와 같이 특정 성별 집단에 대한 비하를 내포한 혐오적인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권리를 침해하거나, 혹은 폭력이나 선동을 주장하지 않아 “의견”으로 구분하였다.

2) 비하·모욕에 해당되는 혐오표현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비하·모욕과 관련된 혐오표현으로 분류한 사례들은 김치녀, 보지, 창녀, 꼴페미나치, 페미니즘 좌석 (임산부 배려석), 성형충과 같은 특정 성별에 대한 혐오적 단어를 포함하고 있음은 물론, 성별고정관념에 근거해 특정 집단을 비하하거나 비난하려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여성과 타국의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비교하는 글, 여성대통령의 성기를 희화화하며 특정 여성을 비하하는 글 등이 이 카테고리에 해당된다.

3) 폭력·선동에 해당되는 혐오표현

폭력 및 선동에 해당되는 혐오표현으로 분류한 사례를 살펴보면 특정 안보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 진보적 이데올로기를 가진 여성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서 조카 패줘라”, “눈까리를 뽑아야 된다”, 혹은 “강간해야 된다”고 이야기 하는 등 극심한 폭력을 유발하거나 선동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 염려되는 표현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3.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제도적 대응방안

가. 우리 사회의 현황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사회로 혐오표현이나 차별표현을 규제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행법상으로 개인을 향한 표현이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거나 불법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혐오표현이 규제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으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상의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표현—예를 들어, 성차별적인 여성혐오표현—을 규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여성혐오표현의 사용을 규제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나. 여성혐오표현 공적 규제를 위한 법률 제·개정 방안

혐오표현금지법의 제정은 우리사회가 혐오표현을 금지한다는 상징으로 해석되어 혐오표현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혐오표현금지법을 제정할 경우 형법에 혐오조항을 신설하고, 표적대

상에 여성을 포함시켜야 하며, 처벌의 대상이 되는 혐오표현을 ‘폭력의 선동’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조항은 특정한 개인을 표적으로 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사람이나 집단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혐오표현 금지를 명시하여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혐오표현의 해악을 알리는 선언적 의미의 혐오표현법을 제정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집단에 대한 혐오가 그 집단에 대한 차별을 뿌리로 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차별법을 제정하여 그 안에 혐오표현금지 조항을 포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통합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통해 성별을 포함하여 인종, 종교 등 차별의 대상이 되는 집단 혹은 차별이유를 명시하며 혐오표현을 차별의 일환으로 고려하는 방안이 있다. 더불어, 2005년 폐지된 성차별금지법을 다시 제정하여 그 안에 여성혐오표현금지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있다.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명예훼손적 내용의 정보와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을 처벌하는 데에도 적용되도록 명예훼손의 내용을 현재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에서 “2. 사람이나 집단을 비방할 목적으로...”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만들어 운영하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르면 ‘사회통합과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각목’이 있는데, 현재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를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 등에 근거해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 조장, 폭력을 선동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혐오표현 규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다. 공동/자율 규제를 통한 여성혐오표현 대응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혐오표현의 남용을 막기 위해 온라인 사업자들이 스스로 이를 규제할 수 있도록 자율 규제 원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자율 규제에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하나는 공동규제로 민간 사업자들이 협력하여 공동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규제의 원칙을 개발하는 것이다.

KISO는 2008년 발족한 포털 자율규제 협의회이다. 현재 네이버, 아프리카 TV를 비롯해 총 11개의 회원사를 두고 있다. KISO는 성별 등으로 구분되는 집단의 “모욕적이고 혐오적인 표현방식”에 대한 삭제 조치를 정책으로 두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사들의 사이트에서는 혐오표현이 여전히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혐오표현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효율적인 모니터링과 신고 조치를 구비할 필요가 있다.

포털 사업자 중에 유튜브, 아프리카 TV, 네이버 TV, VLIVE, 트위치, 카카오 TV, 판도라 TV, 팍콘 TV 등이 콘텐츠에 관한 자율규제 정책을 가지고 있으나, 그 중 혐오표현에 대한 조항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유튜브, 트위치, 카카오 TV 정도이며, 유튜브나 트위치가 문제적 콘텐츠의 하나로 성별에 근거한 중요 콘텐츠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기타 사업자들도 혐오표현 콘텐츠를 금지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이러한 콘텐츠를 발견했을 때의 신고 방법 및 사업자가 취하는 조치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여성혐오표현의 해악은 의식적, 무의식적 차원에서 모두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 사이



에서 유행어처럼 쓰는 혐오표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차별적 의식을 형성하게 한다. 반면에 혐오표현의 의미를 아는 이들이 이러한 표현의 대상이 되게 될 때 심각한 심리적 손상을 입히게 된다. 오늘날 여성혐오표현이 학교 교실에서, 온라인에서, 그리고 친구들 사이의 대화에서 흔하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개선해야 할 문제이다. 그래서 여성혐오표현을 쓰지 않도록 교육하고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성혐오표현의 교육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먼저 여성혐오표현이 청소년 사이의 은어가 되다보니 교사들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선생님의 무관심 속에 혐오표현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다음으로 여성혐오표현을 알더라도 금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 여성혐오표현은 온라인의 특정 커뮤니티나 개인방송을 통해서 새로이 생산되고 아이들은 이를 학습하고 있다. 금지어 목록을 만드는 것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이다. 아이들로 하여금 여성혐오표현의 의미와 해악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교육이다. 이와 함께 여성혐오표현을 쓰는 것이 사회윤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의 상징적 권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혐오표현의 사용금지를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고 법적 규제방안을 제안하였다. 여기서 제안한 법적 규제방안은 여성혐오표현 규제의 국제적인 현황을 참고하여 제안되었다. 여성혐오표현의 제도적 규제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국가는 많지만 불행히도 여성혐오표현을 효율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국가는 아직 없다. 이는 사안의 심각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법제도의 가부장성과 관행성 때문이다. 물론 여성혐오표현의 금지가 표현의 자유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도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하지만 여성혐오표현 자체가 많은 여성들의 표현의 의욕을 억누르기 때문에 여성혐오표현의 금지는 오히려 더 높은 표현의 자유를 초래할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리는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되는 여성혐오표현의 범주를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상식적인 의견의 표출로서의 여성혐오표현까지 처벌하려는 의도는 없는 것을 밝힌다. 여성혐오표현 금지 조항은 처벌도 가능하지만 이를 예방하고 선도하는 상징적 지표가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인터넷 사업자들의 자율규제와 상호보완 되는 차원에서 작동하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Measures for institutional responses against sexist hate speech

I . Introduction

In South Korea, hate speech against women first came to public attention in 1994 with controversies over gender conflict issues such as a policy for the provision of additional consideration to men who had finished their mandatory military service when they applied for employment at public or private organizations. Grounded in stereotypes and prejudices against women, misogyny is one of the common forms of hate behavior directed against minority groups,¹ which also include foreigners and LGBT people in Korea. It is distinctive compared to other discriminatory comments or opinions in that it takes an extremist attitude that disparages or sexually objectifies women.

The phenomenon of sexist hate speech appears to be worsening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s is hate and attacks against those who are different in general, e.g. those with divergent ideas or those from different regions. Recently, misogynistic expressions are increasingly being observed not only on the internet, but also in offline media and in face-to-face situations. It is particularly concerning that some young people are routinely using sexist hate speech, seemingly without being aware of the gravity of the issue.

Misogynistic speech found on the internet falls outside of the normal range of language use in that it is heavily loaded with vulgar words bearing a heightened level of hatred, causing psychological damage to and compromising the social identities of women who use the internet. It also intimidates women and discourages them from active participation in online activities. All forms of hate speech are an iniquity that has a negative impact not only on the target group, but also on society as a whole. In particular, misogynistic speech attacks women's identity and inflicts a serious psychological impact on them. It triggers negative consequences for men as

¹ While women are not a minority in terms of numbers, they are in terms of power and resources compared to men.

well by distorting relations and provoking gender conflict. Consequently, it is necessary to educate the public on the negative implications of sexist hate speech and on refraining from it. In addition, those who use sexist hate speech with ill intentions must be duly punished in order to communicate a societal message that such behaviors are unacceptable. However, hate speech is not currently being properly regulated due to concerns that such regulation could violate the principle of freedom of speech.

Here, I'd like to propose institutional measures to address sexist hate speech. I first suggest legal measures of drafting and revising laws to prohibit sexist hate speech and potential self-regulatory measures allowing internet service providers to address the problem on their platforms.

2.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of sexist hate speech

A. Definition of sexist hate speech

Sexist hate speech can be broadly defined as expressions that disparage, sexually objectify, and/or subjugate women. However, a definition for the purpose of legal regulation needs to be further specified based on the degree of gravity and actual plausibility of regulation of the speech.

The purpose of classifying hate speech is to determine the plausibility and degree of regulation based on the severity of the hate. Determining the severity of hate speech, however, is not an easy task due to the multilayered nature of language and the subjectivity of personal judgement. For example, it appears implausible to establish a consensus standard on the severity required to be considered a severe insult or disparagement, on the acceptable range for freedom of speech, and on whether or not an expression is intended to communicate discrimination/hatred. A standard that changes case-by-case cannot serve as a principle. Therefore, a clear and succinct definition is needed to classify hate speech that calls for legal regulation. All of the definitions discussed above concur that hate speech that incites violence should be subject to regulation. In particular, violence and incitement seem to be a prerequisite for criminal punishment. Hence, sexist hate speech that amounts to a criminal offense can be defined as

hate speech that disparages, sexually objectifies, and/or subjugates women by threatening or inciting violence against them.

Hate speech can also be classified into an expression of opinion or an expression of disparagement and insult. There may be controversy about what is opinion and what is disparagement. In principle, criticizing another sex based on common gender stereotypes can be viewed as hate speech in the form of opinion. For example, criticism of women who fail to fulfill traditional gender roles or an expression of hostility against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would belong here. However, there are terms such as *kimchinyeo* that do not appear to be overtly calling for any violence, but most people are aware that it implies a disparagement of South Korean women. Nevertheless, the standard for judging this word to be hate speech is nebulous and can be controversial, making it difficult to be used as a basis for criminal prosecution even if the person who used it had the intention of belittling women. For this reason, sexist hate speech is considered part of a normal expression of opinion unless it is made in a form with a clear denotation.

The received sense of disparagement and insult is related to the degree of objectification, belittlement, and defamation of the victimized woman. This also applies to the impact of name-calling and contempt. If hate speech defined as an expression of opinion is subject to educational correction, this type of hate speech can be considered a matter of civil defamation or insult. Since typical hate terms such as *kimchinyeo* and *mamchung* (맘충) are generally used as fad words, it would be difficult to address them through legal measures and instead the public needs to be guided through education to voluntarily discontinue their use. In the case of these words being used in combination with an expression of insult and/or incitement, however, the degree of hatred should be considered aggravated.

2. Cases of sexist hate speech

A. Sexist hate speech in the form of an expression of opinion

We defined as an expression of opinion the following type of sexist hate speech: an expression of hatred against women, the women's movement, and/or women's policies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at contains hate words targeting specific gender groups (*hannamchung* (한남충), *halapchung* (할애평), *kkolfemi* (꼴페미), *kimchinyeo*, and *seushinyeo* (스시녀)) but does not directly target or violate the rights of certain individuals or groups or incite violence.

B. Sexist hate speech that constitutes disparagement or insult

Cases of sexist hate speech classified as disparagements of or insults directed at individuals or groups have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they contain hate words against a specific gender (*kimchinyeon* (김치녀), *boji* (보지), *changnyeo* (창녀), *kkolfemi nazi* (꼴페미나치), *feminism joiseok* (페미니즘 좌석, seats for pregnant women in public transportation), and *seonghyeongchung* (성형충)) and contain the intention to disparage certain groups of people based on gender stereotypes. Posts that sexually objectify women and compare Korean women with women from other countries, mock the genitalia of the female president, or ridicule certain women are included in this category.

C. Sexist hate speech amounting to violence or incitement

Cases of sexist hate speech amounting to violence or incitement shared expressions of incitement to severe violence against women with certain perspectives of national security or radical ideologies: e.g. “Go beat them up” (가서 조카 패줘라), “Take out their eyeballs” (눈까리를 뽑아야 된다), or “They should be raped” (강간해야 된다).

3. Measures for institutional responses against sexist hate speech

A. Status in South Korea

South Korea upholds freedom of speech and does not maintain specific laws to prohibit hate speech. Hate speech against individuals can be dealt with under the crime of defamation or insult as defined in criminal law. It can also be regulated if it constitutes what is defined as unlawful information. However, the current system is insufficient to control the rapid expansion

of hate speech on the internet.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reflect on measures to regulate sexist hate speech.

B. Suggestions for the introduction and revision of laws to regulate sexist hate speech

The introduction of a law on hate speech would be welcomed as a symbolic gesture to indicate that hate speech is prohibited in South Korea and would provide practical help in addressing the problem. In this case, a provision on hatred needs to be introduced to the Criminal Code, and women should be specifically included among the targeted groups. The conditions for punishment should be limited to incitement of violence. Article 307 in the Criminal Code regarding the crime of defamation, which is currently limited to defamation against individuals, needs to be expanded to cover both individuals and groups. Instead of pursuing criminal punishment, the prohibition of hate speech should be explicitly defined in the Gender Equality Act in order to raise awareness of the harms of hate speech.

The introduction of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act would be another option given that hatred is based on a discriminatory attitude against its victims. Such a law could specify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individuals and groups on the basis of gender, race, religion, and other grounds, and include hate speech as an aspect of discrimination. Another idea would be to revive the Gender Discrimination Act that was repealed in 2005 and include provisions on sexist hate speech.

Currently,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includes a provision that defines defamatory content and content that provokes fear and anxiety as unlawful. This provision on defamation should be revised from “...in order to slander a person...” to “...in order to slander a person or group...” to ensure that it can be applied to hate speech against women.

The Regulations on the Deliber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by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features a clause defining behaviors that harm social integration and the social order, but hate speech is not included. This clause could be revised so as to provide a clear basis for regulating hate speech: e.g. “inciting discrimination, prejudice,

or violence against individuals or groups on the basis of gender, religion, disability, age, social status and background, region, or vocation without any justifiable cause.”

C. Addressing sexist hate speech through collective or self-regulation

Self-regulatory policies need to be established in order to allow online service providers to help prevent the spread of hate speech on the internet. Self-regulation could be implemented in either of two ways: Private service providers making collective responses or individual service providers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their own regulations.

The 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 (KISO) was launched in 2008 as part of an effort to promote self-regulation of online portal services. It currently spans eleven member organizations including Naver and AfreecaTV. Although the KISO maintains a policy of deleting insults and hate speech directed against individuals on the basis of gender, hate speech has yet to be eradicated on the service networks of its member organizations. It is necessary to clearly define hate speech and implement a more effective monitoring and reporting system.

Among online service providers, YouTube, AfreecaTV, Naver TV, VLIVE, Twitch, Kakao TV, Pandora TV, and Popkon TV have self-regulation policies for the content posted on their networks. However, only YouTube, Twitch, and Kakao TV include provisions on hate speech. YouTube and Twitch, in particular, highlight gender-based hate content as an area of concern. Other service providers should follow their example and prohibit hate content on their networks with clear procedures in place for reporting and penalties.

4. Conclusions

Sexist hate speech causes harm at both the conscious and unconscious levels. Teenagers who use hate speech as fad words can unwittingly establish discriminatory attitudes toward the other gender. Meanwhile, those who understand the implications of hate speech will experience serious psychological distress when they are exposed to it. The widespread use of sexist hate speech in classrooms, on the internet, and among friends is a serious problem. Efforts are

needed at awareness-raising and prohibition.

It can be difficult to educate about sexist hate speech. First of all, teachers may not understand what they hear because it is used as slang terms among teenagers. Students can freely participate in sexist hate speech amidst teachers' indifference. Even when teachers know about some terms, new ones continue to be coined in online communities and on personal broadcasts. Students can adopt them nearly instantly, so simply listing prohibited words does not work. The most effective and fundamental education is to teach students the implications and harm of sexist hate speech. Along with this, the symbolic authority of the law is needed to help the public come to understand that sexist hate speech violates social ethics and is forbidden.

I have suggested legal measures to address the problem based on relevant regulations in other countries. While authorities in many countries are acutely aware of the need to regulate hate speech against women, few have successfully done so. This is not because the problem lacks gravity, but because of the patriarchal nature and deeply rooted practices of the related laws and institutions. Another important point for consideration is the potential negative effect of sexist hate speech on freedom of speech. Given that misogynistic aggression suppresses the desire of women to speak, however, the prohibition of sexist hate speech can in fact increase the overall level of freedom of speech. Our position is that the range of sexist hate speech subject to legal regulation should be strictly limited so that expressions of opinion at the common-sense level remain protected. Prohibiting sexist hate speech by law, ideally complemented by self-regulation on the part of internet service providers, would serve as a symbolic device to combat the problem and enable punishment when necessary.

References

In Korean language

Lee Sooyeon, Jeong Su-ah, Kim Su-ah, and Na Un-ju (2015). *Online Seongchabyeolseong Monitoring Mit Monitoring Dogu Gaebal Yeongu (The Monitoring of Online Sexism and the Development of a Monitoring Tool)*, The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Lee Sooyeon, Lee Hye-rim, Kim Su-ah, and Kim Ha-yan (2014). *Yeoseongeui Online Ingwonpihae Hyeonhwangwa Gaeseonbangan Yeongu (Violation of Women's Human Rights on the Internet and Measures for Improvement)*, The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Lee Seung-hyeon (2016). *Hyeomopyohyeonae Daehan Heonbeopjeok Gochal (Review of Hate Speech in Light of the Constitution)*, doctoral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Ju Gyeong-hee, Choi Ji-eun, and Lee Seong-gyu (2013). *Internet Daetgeulmunhwaeseo Flaming Hangdongae Yeonghyangeul Michinun Yoinae Gwanhan Yeongu (Factors Affecting Flaming Behaviors in Online Comments)*, *The Journal of Cultural Industry, Issue 2, Volume 13*, pp. 47-57.

Hong Seong-su, Kim Jeong-hye, Noh Jin-seok, Ryu Min-hee, Lee Seong-hyeon, Lee Ju-yeong, and Cho Seung-mi (2016). *Hyeomopyohyeon Siltaejosa Mit Gyujebangan Yeongu (Status of Hate Speech and Measures for Regulatio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Policy Report.

In English language

Barlett, J., R. Norrie, S. Patel, R. Umpel, & S. Wibberley (2014). *Misogyny on Twitter*, Demos.

Belavusau, Uladzislau (2017). Hate Speech.
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3022531 (Accessed on June 1, 2018.)

Dodge, A. (2016). Digitizing rape culture: online sexual violence and the power of the digital photograph, *Crime Media Culture*, V. 12(1): 65-82.

Glick, P. & S. Fiske (1999). "Sexism and Other 'Isms': Interdependence, Status, and the Ambivalent Content of Stereotypes" in W. Swann (ed.) *Sexism and stereotypes in modern society: the gender science of Janet Taylor Spence*, American: 193-221. Psychological Association.

Fox, J. & W. Y. Tang (2016). Women's experiences with general and sexual harassment in online video games: rumination, organization responsiveness, withdrawal and coping strategies. *New Media & Society*: 1-19.

Jane, E. (2016). Online misogyny and feminist digilantism, *Continuum: Journal of Media & Cultural Studies*, 30(3): 284-297.

Jenson, J. & S. De Castell (2013). Tipping points: Marginality, misogyny and videogames, *Journal of Curriculum Theorizing* 29(2): 72-83.

Keipi, T., M. Näsi, A. Oksanen & P. Räsänen. (2017). *Online Hate and Harmful Content*. London: Routledg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2016). New challenges to freedom of expression: countering online abuse of female journalists.
<https://www.osce.org/fom/220411?download=true> (Accessed on May 10, 2018.)

Weston-Scheuber, K. (2012). Gender and the prohibition of hate speech. *QUT Law & Justice Journal*, 12(2), 132-150.

제5회 국제인권심포지엄
The 5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ymposium

혐오표현의 확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해외 사례로 보는 제도적 대안
How to Respond to the Spread of Hate Speech?
- Institutional Countermeasures Learning from International Cases

Session 1

혐오표현의 국내외 현황과 관련제도
Current Contours of Hate Speech and Regulations

토론자 | Discussant

Kimberley Barker

University of Stirling 교수
Lecturer of University of Stirling

영국 관점에서 본 온라인상 혐오표현과 여성

키워드:

여성에 대한 사이버 폭력; 혐오표현; 법; 인권; 인터넷 규제

초록:

SNS의 빠른 성장과 모바일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우리는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회와 연결되어 살아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SNS 프로필로 인해 어떤 문제가 생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본 적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SNS상 괴롭힘을 비롯한 온라인 괴롭힘과 사이버 폭력, 그리고 혐오표현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유사한 사례와 관련 판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법적 조치가 적용될 수 있을까?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인 표현,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수준의 혐오표현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러한 구분은 적합한 것일까? 사이버 공간은 사이버 공간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참여를 위해 필수적인 반면 왜 여성과 여아들에게는 본질적으로 비우호적이고 심지어 안전하지 않은 공간이 되기도 하는 것일까? 이런 온라인 플랫폼과 SNS는 온라인 폭력 대응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플랫폼 기업이 정형화된 태도, 부정과 실패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규제 방안을 고려해야 할까? 그렇다면 규제방안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 것인가? 플랫폼 기업의 책임과 법제의 개입 간에 책임의 차이가 있을까? 영국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본 발제문은 SNS를 둘러싼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해 현 법제가 충분한지 살펴보기에 앞서 SNS 괴롭힘, 온라인 혐오표현을 중심으로 SNS 상호소통과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점과 규제 방안을 조명한다. SNS를 통한 소통이 현 온라인 시대의 주요 단면이 되었지만, 영국과 유럽연합 내의 규제 메커니즘은 관련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본 발제문에서는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온라인 혐오 사례에 대한 법적 대응 및 조치를 살펴보고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데 플랫폼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분석하며, 책임감의 차이에 대해 논한다. 본 발제문은 특히 인권과 인터넷 규제 관점에서 관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우선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와 관련한 현행 법제의 한계점을 서술하기에 앞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온라인 폭력, 온라인 혐오 현상을 분석하고 영국과 유럽연합의 법 체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발제문은 관련 법률 규정을 마련하고 수정하는 방식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영국내의 현 개혁 안건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견해를 밝힌다.

소개 & 개요

“인터넷이란 것은 좋지만은 않다. 정정한다. 사실 인터넷은 최악의 도구이다.”¹⁾

온라인상에서 여성이라 밝히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온라인에서 활발하고 주장이 강한 여성이 되는 것은 예상보다 상당히 위험하고, 여성이 활발하게 기존 또는 대다수의 의견에 반하는 주장을 펴는 것은 아침 식사 도중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이나 위험하다. 그러나 이것은 매일 수백만 명의 여성이 온라인에서 겪고 있는 현실이다. 대부분 온라인에서 유명한 여성이 아니어도 온라인 SNS 계정이 있는 여성이라면 충분히 겪을 수 있다.

바로 이것이 SNS가 '언제나 켜져 있는'시대의 현실이다. 특히 온라인에서 대화를 나누고 현대 사회 이슈에 대해 담론을 나눌 때 여성이 욕설과 협박등을 받는 대상이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현상이다. 온라인상의 여성이 겪는 문제가 성적 편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중대하고 피해를 입히지만, 온라인 학대 및 온라인 혐오도 전체 성인의 40 % 이상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²⁾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아마도 이런 행동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 학대 행동에 대해서 남성의 54%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데 비해 여성의 경우 70%가 심각한 문제로 간주한다.³⁾ 이 문제를 중요한 문제로 보는 여성의 비율은 18-29 세의 나이대에서 83%로 증가한다.⁴⁾ 이 집단의 여성들이 스마트 폰 세대라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통계를 고려할 때 팽배한 온라인 학대 행위에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기가 어렵다.⁵⁾

또 다른 연구에서는 단 3주 만에 6500 명의 인터넷 사용자가 온라인 폭력을 겪으며 약 1만개의 폭력적인 트윗을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⁶⁾ 이러한 통계는 2016 년 걸가이딩(GirlGuiding) 보고서의 11-21세 연령대의 젊은 여성 중 절반 이상이 온라인에서 성차별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고

¹⁾ WIRED, 'Open Letter to the Internet' (24 August 2016) <https://www.wired.com/2016/08/open-letter-to-the-internet/>.

²⁾ Bruce Drake, 'The darkest side of online harassment: Menacing behavior' Pew Research Center (1 June 2015) <https://www.pewresearch.org/fact-tank/2015/06/01/the-darkest-side-of-online-harassment-menacing-behavior/>.

³⁾ Maeve Duggan, 'Men, women experience and view online harassment differently' Pew Research Center (14 July 2017) <https://www.pewresearch.org/fact-tank/2017/07/14/men-women-experience-and-view-online-harassment-differently/>.

⁴⁾ Maeve Duggan, 'Men, women experience and view online harassment differently' Pew Research Center (14 July 2017) <https://www.pewresearch.org/fact-tank/2017/07/14/men-women-experience-and-view-online-harassment-differently/>.

⁵⁾ K Barker, 'Online Misogyny, Hate Speech & Scotland: Two Steps Forward and 1 Step Back?' GSPR (2018) 108 (11).

⁶⁾ DEMOS (2016) 'The use of misogynistic terms on Twitter' available at: <https://www.demos.co.uk/wp-content/uploads/2016/05/Misogyny-online.pdf>.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성차별보다 훨씬 극단적인 것으로 인식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⁷ 성폭력은 온라인 여성을 표적으로 삼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며 여성들은 스스로가 성별로 인해 폭력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쉽게 인지한다. 이 보고서는 이런 온라인 성폭력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며 모욕적이고 혐오 적인 트윗의 내용을 고려할 때 그 영향은 더욱 커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본 발제문은 영국 내에서 온라인 혐오표현, 특히 본 발제문에서 여성 대상 온라인 폭력(OVAW)이라고 지칭하는 성적 동기를 가진 온라인 혐오의 문제적인 본질을 입증하는 주요 사례를 간략히 다룬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 부분의 현 법률 및 규제 체계를 살펴보기 전에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을 비판한다. 이어서 현재 영국내 다수 개혁안 관련 견해를 밝히기에 앞서 현 규제 메커니즘의 한계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온라인 혐오표현 중에서도 특히 성별에 기반한 온라인 혐오표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한다. 먼저 사법제도가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널리 확산될 수 있는 이 조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동시에 법 이외의 측면을 다룬다.

이것은 1차원적 솔루션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 혹은 현상이 아니다. 물론 단순히 법을 수정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지만 동문제는 문화, 세대, 사회, 계층, 그리고 사법권에 모두 걸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⁸ 특히, 일부 폭력 가해자를 추적하고 식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법질서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이런 어려움은 여성 대상 온라인 폭력, 온라인 혐오 및 혐오표현에 대한 광범위적 대응 노력의 일부분이다. 국제 사회와 국제 조약기구는 모두 이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어느 범위까지 온라인 행위, 폭력적인 게시물 및 의견을 수용할지와 관련한 기본 조항을 결정하는 플랫폼 자체도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본질적으로, 온라인 폭력 및 온라인 혐오표현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호스팅 플랫폼이 가지는 민영화 적인 특성으로 인해 이러한 공간이 민간 검열의 공간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모든 법적 및 사회적 문제와 마찬가지로 균형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⁹ 단순히 불쾌감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법적으로 규제되거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거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실제로, 적어도 영국의 사법제도는 온라인 혐오표현 대응에 다소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현 상황에 주목한다.

⁷ Girlguiding, 'Girls' Attitudes Survey 2016' 17-19, available at: <https://www.girlguiding.org.uk/globalassets/docs-and-resources/research-and-campaigns/girls-attitudes-survey-2016.pdf>.

⁸ Kim Barker & Olga Jurasz, *Online Misogyny as a Hate Crime: A Challenge for Legal Regulation?* (Routledge, 2019) 59.

⁹ Kim Barker & Olga Jurasz, *Online Misogyny as a Hate Crime: A Challenge for Legal Regulation?* (Routledge, 2019) 98.

현재 상황: 여성 대상 온라인 폭력 및 혐오

“인터넷은 백만의 목소리가 널리 퍼지도록 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모두가 민주적인 방식으로 정보 액세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용자에게 그런 자유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방종으로 전락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됩니다. 인터넷이 더욱 확장되고 강력해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려 했지만 그 중 일부는 어리석은 자들 이거나 혹은 악인들이었습니다. PC통신상에서 서로를 비난하고 공격했던 불꽃 전쟁(flame wars)을 기억하십니까? 당시엔 대응할 수 있는 면역체계가 없었고, 결국 부패되기 시작했습니다...”¹⁰

유럽 평의회는 2016 년 온라인상에서 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소수의 개인들이 여성의 온라인 게시물 작성을 문제 삼는 것 이상으로 보다 조직적이며 실제로 여성 대상 온라인 폭력의 본질은 사회적 태도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세상이 나타났지만, 성 차별적 혐오표현의 근본 원인은 기술과 별개로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던 여성과 남성의 불균형 적인 권력 관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¹¹ 안타깝게도 이 발언은 기술이 디지털 사회에서 여성의 의견과 참여를 억압하는데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즉 이 문제는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인권 문제이자 특히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수준인 특정 국가에 유엔이 취한 조치를 반영하기 위해 국제 사회에서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안이다.¹²

영국에서는 온라인 상의 혐오표현과 폭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또는 도전 과제가 상당히 심각하며, 특히 정치적으로 활발하고 저명한 여성과 관련된 문제 사례들이 가장 많고 잘 알려져 있다. 2016 년 이후 영국의 불안정하고 폭력적인 정치적 상황을 감안할 때 SNS 플랫폼을 통해 전송되는 폭력적, 공격적, 불법적인 유해 콘텐츠의 중요성과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동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기 위해 여성이 온라인상에서 극단적 폭력의 대상이 되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확인하였다.

¹⁰ WIRED, 'Open Letter to the Internet' (24 August 2016) <https://www.wired.com/2016/08/open-letter-to-the-internet/>.

¹¹ Council of Europe, 'Combating sexist hate speech' (2016) 2 available at: <https://edoc.coe.int/en/gender-equality/6995-combating-sexist-hate-speech.html>.

¹² See for example: United Nations HRC ICCPR 4th Periodic Report (CCPR/C/KOR/CO/4) 2015 recommendation tha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needs to publicly indicate its intolerance of every form of discrimination, including that of hate speech (para 16), but see also UN CEDAW Committee 8th Periodic Report (CEDAW/O/KOR/CO/8) 2018 where CEDAW Committee recommended tha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dopt legal measures to prohibit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para 13).

R v Nimmo & Sorley (2014) (미보고사례)

영국 법원에서 마이크로 블로깅 사이트인 트위터를 통해 혐오적, 폭력적인 메시지를 전달한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고, 스텔라 크리시(Stella Creasy) 하원의원과 캐롤라인 크리아도 페레즈(Caroline Criado-Perez) 평등 운동가에게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두 명의 악명 높은 악플러 (악성 댓글을 게재하는 사람)는 각각 8주와 10주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 여성들이 트위터에서 살인과 강간 협박을 받고 폭력적인 메시지를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은 영국의 새 지폐에 남성이 아닌 여성을 내세우기 위해 감히 캠페인을 벌인 것이다. 리들(Riddle J)판사는 구금형을 내리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저들의 불쾌한 행위로 인한 피해는 즉각적인 구금이 아닌 다른 형을 내리는 것이 부적절할 정도다... 그 피해 정도가 가히 막심하다."¹³ 성적 동기 기반의 혐오표현에 구금판결을 내린 것은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이 또한 만족스러운 대응책은 아니다. 선고된 형량은 매우 짧았다. 저들의 폭력적인 메시지를 살인이나 강간 협박이 아닌 통신망 오용 혐의에 대해서만 고려하여 기소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R v Nimmo & Sorley* 판례는 여전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제도에 상당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R v Viscount St Davids* 사례는 젠더 기반 사이버 폭력(OGBV)관련 문제를 다룬 두 번째 대표적인 판례이다.

R v Viscount St Davids (2017) (미보고사례)

이 사례의 문제점과 행동 또한 사회적으로 저명한 한 여성에 대한 위협과 폭력적인 행위와 관련이 있다. 이 사건에서 성 데이비스 자작(Viscount St Davids)은 브렉시트 국민 투표와 관련하여 영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나 밀러(Gina Miller)를 인종 차별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밀러의 행동이나 정부를 상대로한 법적소송의 판결에 반감을 품은 자작은 Facebook에 Gina Miller 살해에 대한 현상금을 게시하고 인종 차별적인 장광설을 쏟아냈다. 자작의 발언은 인종 차별적일 뿐 아니라 성적 편향적인 부분도 포함되어 명백한 온라인 혐오표현이었다. 그는 결국 통신망 오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엠마 아버넛(Emma Arbuthnot) 상급 지방법원 판사(최고 사법행정관)는 12주의 징역형을 선고했다.¹⁴ *R v Viscount St Davids* 사례는 *R v Nimmo & Sorley* 판례와는 달리 젠더 기반의 위협이나 폭력이 아닌 명백한 인종차별적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통상 8주 대신 12주로 형량이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서 형기가 늘어난 것과는 별개로, 젠더 기반의 온라인 혐오에 대한

¹³ *R v Nimmo & Sorley* (unreported) (2014), 'Sentencing Comments' per Howard Riddle, 24 January 2014. <https://www.judiciary.gov.uk/wp-content/uploads/JCO/Documents/Judgments/r-v-nimmo-and-sorley.pdf>

¹⁴ *R v Viscount St Davids* (2017) (unreported) <https://www.judiciary.uk/wp-content/uploads/2017/07/r-v-lord-st-davids-20170714-sentencing-remarks.pdf>, 4.

문제에 있어 사법 제도가 이와 같은 여성 폭력을 해결하는 방식을 고려할 때 여전이 여성 비하적인 성격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사례인 *R v Couch* (2019)은 상당히 최근의 판례로 상대적으로 간접적이지만 여전히 악의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으로 정치적으로 저명한 여성을 타겟으로 삼았다.

R v Couch (2019) (미보고사례)

이 경우에도, 한 여성 하원의원이 젠더 기반의 사이버 폭력의 대상이 되었다. 이 사례에서 피고인 카우치(Couch)는 피해자인 하이드 엘렌 하원의원 (Heidi Allen MP)에게 2019 년 1 월 두 개의 트윗과 Facebook 게시물을 보냈다. 이 전 사례와는 다르게 카우치는 피해자의 집이 찍힌 항공사진을 포함한 협박 메시지를 SNS에 게시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더욱 심각성을 갖는다. 가해자는 동 게시물을 올리면서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사람들이 피해자의 주소를 요청했으나 아직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판결문에서 마이클 스노우(Michael Snow) 판사는 피해자인 하원의원의 주소를 이미 알고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악의적인 행동을 강조했다. 카우치는 통신망 부적절 이용 2회의 혐의로 기소되어 24주의 구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범죄의 악의적인 성격은 피고가 과거 군인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 정도가 극심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이 그녀에게 미친 영향을 언급했을 때 이 사건의 심각성이 더욱 뚜렷해 졌다. 그녀는 조깅을 그만 두었고 집안에 비상등과 비상 버튼을 설치했다. 이 사례에서는 더 긴 형량이 선고되었지만 개인의 주소와 유명 정치인의 동향을 모두 파악했다는 사실을 드러낸 만큼 위협적이고 불안감을 주는 사건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24주의 형량은 그리 길지 않다. 판결에서 판사는 하원의원을 위협하는 것은 일반인을 공격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민주주의에 대한 본질적인 공격" 이라 밖에 표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지방 판사의 의견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사법적 대응은 단순한 구금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이 사건만 놓고 보면 비교적 사소한 사건으로 보이지만 2016 년 토마스 메이어 (Thomas Mair)에 의해 살해된 동료 하원의원 조 콕스 (Jo Cox)의 사망사건과 비추어 볼 때 한 여성 하원의원을 위협한 이번 사건은 가볍게 다룰 사안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례는 말하자면 *R v Nimmo & Sorley* and *R v Viscount St Davids*, 판례와 같은 혐오표현은 아닐 수 있으나 젠더 편향에 의해 유발된 온라인 괴롭힘에 해당한다. 인터넷, SNS, 위협 및 여성. 이 네 가지 요소는 우선 SNS의 변질된 사용이란 문제적 특성을 나타낸다. 둘째,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위협의 경우 온라인상의 위협은 더욱 용이하게 전달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온라인상의 혐오: 영국의 접근법

온라인상의 혐오를 다루는 법률 조항의 범위에 관하여, 적어도 잉글랜드, 웨일스 관할권 내에서는 형법이 이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많은 논쟁이 이어져 왔다. 이 문제는 유럽연합 내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되어 온 사안인데, 비록 온라인 극단주의와 테러 관련 콘텐츠에 한해서이긴 하나 SNS 플랫폼과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¹⁵ 당연히 트위터나 페이스북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데에 있어 우선순위는 존재하지만, 어찌 됐든 국내 수준에서 발생하는 혐오표현 문제, 특히 온라인 혐오표현(여성이 주요 타깃이든 아니든)를 다루는 데 있어서 형법이 가장 큰 위력을 가지고 있다.

영국에서 모욕적, 가학적 연사에 대처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법적 조항은 혐오 범죄와 직접적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정보통신법의 악용과 깊은 관련이 있다. 2003년 제정된 통신법 제127조는 개별적이지만 상호 관련이 있는 두 가지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이 조항은 모두 위협적이거나 “극도로 모욕적인¹⁶” 발언이 온라인에 게시되었을 때에만 적용될 수 있다. 물론 유럽 인권협약 제10조에 포함된 조항들은 제10조가 불가침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나, 이 조항들은 혐오를 다루지 않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¹⁷ 즉 어떠한 표현을 범죄로 규정하기 위한 조항들을 고려할 때, 127조에 따르면 표현 자체의 기본입장을 처벌하기보다¹⁸ 표현에 귀속된 각각의 요소 중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하며, 법원을 통한 유죄 판결에 의해서만 범죄로 간주한다.

127조에서 명시한 범죄는 SNS에 게시된 여성에 대한 가학적 편견이나 선입견을 동일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아마 127조 체계 가장 큰 결함은, 기소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특정 발언이 단지 위협적이거나 가학적인 정도가 아니라 극도로 모욕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에 기초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27조 체계는 충족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나게 높은 법적 한계점을 부여한다. 이 기준이 고도로 엄중하며, 좀처럼 달성하기 어렵다는 바는 이미 강조된 바 있다.¹⁹ 기소 요건을

¹⁵ See e.g. Commission Recommendation of 1.3.2018 on measures to effectively tackle illegal content online (C(2018) 1177 final) <https://ec.europa.eu/digital-single-market/en/news/commission-recommendationmeasures-effectively-tackle-illegal-content-online>.

¹⁶ Communications Act 2003, s127(1)(a), s127(2)(a) and s127(2)(c).

¹⁷ Article 10(2)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¹⁸ Kim Barker & Olga Jurasz, Online Misogyny as a Hate Crime: A Challenge for Legal Regulation? (Routledge, 2019), 73.

¹⁹ Ms Marit Maij, Rapporteur of the Council of Europe Parliamentary Assembly Committee on Equality & NonDiscrimination, in her Report: ‘Ending cyber-discrimination and online hate’ Doc. 14217 (13 December 2016), para.32, available at: <http://bit.ly/2hX6mPA>.

충족시키기 위한 기준이 높은 것은 잠재적 검열과 표현의 자유의 문제 때문이라 생각될 수 있으나, 그러한 정당성을 뒷받침할 증거는 해당 법령의 지침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통신법과 더불어 주요한 법률은 1988년 제정된 악성통신법이다. 이 법은 인터넷과 SNS 시대보다 앞서 제정되었으나, 초점이 다를지언정 온라인 오남용을 다룰 수 있는 두 가지 조항을 포함한다. 악성통신법 제 1조의 초점은 바로 위협을 가하는 것이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학대 상황에서 놀랄 만큼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사례 모두 통신법과 악성통신법에 의거해 추가 혐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며, 2003년 통신법에서 도출되는 형량이 1988년 악성통신법에서 도출될 수 있는 것보다 높기 때문이다.

통신법 위반행위 이외에도, 다른 법적 조항들을 사용해 온라인 혐오와 온라인상의 모욕적 연사를 다룰 수 있다. 협박에 대처하는 상황에서 1861년 제정된 인재법(OAPA)이 사용될 수 있으며, SNS를 통한 살해 협박이 이루어졌을 때 특히 그러하다. 그러나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1861년에 제정된 조항이 전자상 살해 협박이라는 맥락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배제된 시기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 규정은 협박이 이루어지는 맥락에서 핵심 고려사항으로 부각되었다.²⁰ 맥락이 중요하다면, 지금은 여성을 향한 온라인 혐오를 다루는 데 해당 법령을 사용해야 할 시기이다.

마찬가지로, 1986년 제정된 공공질서법(POA)에는 여성을 향하는 온라인상의 학대와 혐오를 잠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수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매우 많이 개정된 이 법안에 포함된 세 가지 조항은 모두 흡사한 행동을 다루지만, 다른 선고 결과를 가져온다. 초점이 맞춰진 행동은 반드시 협박이나 학대, 모욕적 연사나 행동을 수반해야 한다.²¹ 이러한 조항들의 핵심은 앞서 이야기된 행동을 묻어두는 듯 보이며, 이는 온라인에서 여성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과도 동일하다. 이 조항들의 어려움은, 누군가는 괴롭힘, 공포, 괴로움 또는 불안을 일으키려는 가해자의 시야와 심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누군가 모욕적인 트윗을 하는 것을 법적 대응하기는 매우 어렵다. 결과적으로, 이상의 조항들을 사용해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응해 승리를 거두는 일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마지막으로, 1997년 제정된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법’은 온라인 혐오에 노출된 여성들에게 약간 더 큰 희망을 준다. 해당 법안은 괴롭힘, 스토킹, 사람에 의한 폭력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심각한 불안과 고통에 해당하는 폭력에 대한 공포 등 네 가지 사안을 포함하고 있다.²² 1997년 보호법의 조항을 사용하는 어려움은 1861년의 인재법(OAPA) 그리고 1986년의 공공질서법(POA)과 비교해 덜

²⁰ Dhir v Saddler [2017] EWHC 3155 QB; Kim Barker & Olga Jurasz, Online Misogyny as a Hate Crime: A Challenge for Legal Regulation? (Routledge, 2019) 49.

²¹ Public Order Act 1986, s4(1).

²² See further Kim Barker & Olga Jurasz, Online Misogyny as a Hate Crime: A Challenge for Legal Regulation? (Routledge, 2019) pp 38-80.

명백한데, 그 이유는 1997년 보호법은 전화상의 괴롭힘²³, 그리고 협박성 음성메시지²⁴ 두 가지가 모두 고려되는 상황에서 입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이드 앨런 하원의원 같은 여성을 향한 온라인상의 가학적이며 위협적인 행위를 조사하기에 1997년 보호법을 사용한다는 것을 상상하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안타깝게도, SNS와 온라인 혐오에 관련해 이 법안을 고려한 고위급 사법 조치는 아직 없었다. Gough v DPP²⁵의 법원이, 많은 경우 온라인상의 모욕이 가학적일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점은 더욱 당혹스럽다. 그렇다면 더욱 심각한 범죄 사안에 기소의 건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부분적으로 영국 상원이 표하는 “현재 법령에는 적절히 조정될 수 있는 측면들과 채울 수 있는 특정 공백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SNS와 다른 정보기술을 사용한 행동들에 대해 새로운 법령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확신하지 않는다.”²⁶와 같은 생각에 기인한다.

또한 성별에 의해 동기가 부여된 혐오범죄를 다루는 데 있어서, 현 영국의 증오 범죄 법안에 성별 요소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일부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빈틈은 본질적으로 당신이 성 데이비스 자작 같이 기소될 수 있음을 뜻한다. 인종적 혐오에 의한 소셜 네트워크 오남용의 경우 더욱 높은 형량이 내려질 것이고, 그 이유는 인종의 경우 이미 사회에서 공인되고 보호되는 특성이기 때문이다. 반면, 성별에 의하여 그렇게 높은 양형이 부과되기는 어렵다. 성 데이비스 자작이 지나 밀러를 흑인 여성이 아닌, 단순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학대했다면 그는 상향조정 없는 선고를 받았을 것이다. 현행 영국법에 따르면, 성별에 근거하여 기소할 수 있는 혐오범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이 온라인에서 성차별적 표현을 한다고 해서 선고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바커와 주라스의 지적대로, 이것은 극도로 문제적이며, 구조적 불평등을 강화한다. 또한, 온라인상의 성별에 기초한 혐오를 젠더 관점으로 해결하기 어렵게 한다. 이와 같이, 성별에 기초한 혐오에 대처하고,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응하고, 인터넷이 모두가 자유롭게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평등한’ 장이 되기까지는 많은 장벽을 넘어야 한다.

(디지털) 지평선에 대한 개혁?

소통의 격차와 영국의 혐오범죄 관련 조항을 넘어서 뿌리 깊은 불평등, 특히 온라인상의 혐오와 여성이 겪는 학대를 해결함에 있어서 지평선에 희망의 빛은 존재한다. 디지털 유행병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문제가 만연한 현상에, 새로운 법률 개혁 제안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고

²³ R v Ireland [1997] 3 WLR 534.

²⁴ R v Peter’s (Juliet) [2002] EWCA Crim 1271.

²⁵ Gough v DPP [2013] EWHC 3267 (Admin).

²⁶ House of Lords Select Committee on Communications, Paper 37 (2014-15), 9.

있다.

첫째로, 잉글랜드와 웨일스, 스코틀랜드 관할권에서 혐오범죄 체계가 개혁 중에 있다. 스코틀랜드의 의제는 더욱 발전했으며 진보적인데,²⁷ 스코틀랜드 법률 위원회와 스코틀랜드 정부가 혐오가 발생할 수 있는 근간을 바꾸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계획에는 여성혐오적 괴롭힘을 다루는 새로운 조항들이 잠재적으로 포함되며,²⁸ 동시에 성별 악화자²⁹를 소개해 잠재적으로 성별을 혐오범죄 체계의 한 요소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작업으로, 법적으로 ‘여성혐오’를 정의하는 데 독특한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잠재적 난관 또한 제시한다.

둘째로,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법률 위원회는 혐오범죄 체계에 대해 자체적 검토에 착수하고자 하고 있다.³⁰ 이 또한 혐오범죄에 기여하는 특정 요소들에 변화를 주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 검토가 어떠한 결론에 다다를지에 대한 명확한 지표는 아직 없지만, 저자의 추측으로는 혐오범죄 관련 조항에 변화를 만들어 법률로 특정 요소들을 지정하고자 할 것으로 생각된다.³¹ 여기에 처음으로 성별이라는 요소가 포함되기를 바란다.

셋째로, 머지 않은 미래 안에 모욕성 발언에 관련해 법적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 기대되고 있다. 이는 진전되어야 하는 만큼 도전적 과제인데, 소통뿐 아니라 인터넷 규제에 대한 요소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대로 이 도전의 규모는 매우 크다. 현재로서 아직은 확신 가능한 세부 사항이 없지만, 상원에서 2015년³² 이와 관련한 검토와 협의가 계속되어 SNS 플랫폼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³³을 인식해 2003년 통신법의 기준을 낮추게 될 것임을 기대한다.

혐오와 모욕적 의사표현을 넘어, 인터넷 규제에 관하여 고려해야 할 폭넓은 기준이 산재해 있다. 이는

²⁷ K Barker, ‘Online Misogyny, Hate Speech & Scotland: Two Steps Forward and 1 Step Back?’ GSPR (2018) 108 (11)

²⁸ Scottish Government, ‘One Scotland: Hate Has No Home Here Consultation on Amending Hate Crime Legislation’ (November 2018) https://consult.gov.scot/hate-crime/consultation-on-scottish-hate-crimelegislation/user_uploads/sct08182935681.pdf, 13.

²⁹ Scottish Government, ‘One Scotland: Hate Has No Home Here Consultation on Amending Hate Crime Legislation’ (November 2018) https://consult.gov.scot/hate-crime/consultation-on-scottish-hate-crimelegislation/user_uploads/sct08182935681.pdf, 17.

³⁰ Law Commission, ‘Law Commission review into hate crime announced’ (18 October 2018) <https://www.lawcom.gov.uk/law-commission-review-into-hate-crime-announced/>.

³¹ Kim Barker & Olga Jurasz, ‘Online misogyny as a hate crime: #TimesUp’ Law Commission Hate Crime Conference, Oxford Brookes University, March 2019 (notes on file with author).

³² Kim Barker & Olga Jurasz, Online Misogyny as a Hate Crime: A Challenge for Legal Regulation? (Routledge, 2019) 125.

³³ House of Lords Select Committee on Communications, Paper 37 (2014-15), 9.

최근 온라인 유해콘텐츠 백서(Online Harms White Paper)³⁴를 통하여 영국 정부의 협의 주제가 되었다. 이것은 영국의 인터넷을 ‘더 안전히’ 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이다. 그 중심에는 SNS와 기타 플랫폼에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관리 의무를 제안하는 방안이 있다. 그러한 의무의 정확한 형태는 구체화되지 않았으며, 또한 심각한 문제들을 제기할 수 있다. 집행 가능성과 불이행의 결과 또한 고려해야 한다. 이는 특히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제안이며, 대중에게 불편적으로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다.³⁵ 그렇다고 할지라도, 가장 실행 가능성이 높은 의무 형태 모델은 경고와 게재 중단일 것이며, 법령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유럽연합이 테러 관련 콘텐츠에 가하는 요구조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와 같이 온라인 유해콘텐츠 백서(Online Harms White Paper)는 일종의 ‘무용지물’로 작용하여, 실제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며, 사법적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표현의 일부 구성요소를 불법화하고자 한다. 선제적이며 예방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이는 독단적이며 민주적인 디지털 사회의 이상과 직접적으로 모순된다. 이러한 조치가 실제로 고려된다면, 궤도에서 멈추어지기를 바라는 바이다.

결론:

온라인상의 가학적, 협박성, 위협적, 혐오스러운 행동을 식별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나, 해악과 함의를 분류하고 대응하는 것은 법률 시스템뿐 아니라 치안 및 사법 기관에서도 매우 어려운 것으로 이미 입증된 바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플랫폼의 사용자들은 플랫폼을 법이 개입하여 야 하는 공간으로 인식하나, 플랫폼 소유 기업들은 온전히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독립체이며 소유인 플랫폼 안의 규칙과 규정을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Suzor 가 지적하듯, “법적 현실에서 SNS 플랫폼은 그들을 창조하는 기업에 속하며, 이러한 기업들은 소셜 플랫폼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에 절대적 힘을 가지고 있다.”³⁶ 이에 규제 기관, 플랫폼 사용자 그리고 플랫폼 사이에는 피하기 어려운 긴장이 생긴다. 플랫폼 사용자들은 규정과 통제에 관한 명백한 필요를 느끼고 있으나, 규제 기관은 수요가 많고 사용량 또한 높으며 공공의 공간이고, 누구에게도 가입을 강요할 수 없는 공간을 만드는 플랫폼 소유 기업들의 역할 그리고 이익과 충돌한다. 이것이 바로 통제와 입법에 관련된 문제의 진정한 핵심이다. 법적 규정들을 입법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 이러한 규정을 시행하는 것은 뚜렷한 도전과제로 남을 수 있다. 특히 해당 규정이 플랫폼의 운영을 간섭하려고 시도할 경우, 결과적으로 사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충돌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방식으로 간섭이 이루어진다면 플랫폼들에 있어 위협으로 간주될 것이다. 플랫폼 소유 기업들은 일관되게 SNS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

³⁴ DCMS, ‘Online Harms White Paper’ (8 April 2019) <https://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onlineharms-white-paper>.

³⁵ See for example: Edina Harbinja, Mark Leiser & Kim Barker et al, ‘BILETA Online Harms White Paper: Consultation Response’ (May 2019) <http://bileta.ac.uk/Publications/>.

³⁶ Nicolas P Suzor, Lawless – The Secret Rules That Govern our Digital Lives (CUP, 2019) 11.

사항이며, 사용자들은 언제나 계정을 비활성화하고 탈퇴하기를 선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 시점에서 상황은 참여 가능한 공간과 포용의 개념으로 회귀한다. 오늘날의 디지털 사회에서 개인은 어떤 식으로든 SNS에 관여하지 않고는 완전한 사회참여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이, 플랫폼의 주장대로 개인의 선택이든, 가학과 혐오의 대상이 되어 SNS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든 이는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또다른 귀결점은 바로 사적이며 선택적 공간을 통해 혐오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이는 여전히 잠재적 범죄행위이며 경찰 기관에 의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의 가정 내에서 학대가 이루어진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해서도 같은 접근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기 어렵다.

(Online) Hate Speech & Women – Perspectives from the UK

Keywords:

Online violence against women; hate speech; law; human rights; internet regulation.

Abstract:

The rapid growth of social media, and mobile Internet use has allowed more of us to be connected to our social and virtual presences at all hours and in all locations. Most of us never give much thought to what might go wrong with our social media profiles. Few of us consider this to be likely. Yet there is a growing trend of social media abuses, online harassment and cyber bullying, and hate speech activities. More and more of these incidents are being reported, and there is a growing body of case law surrounding such issues. But, what means of justice are available? Is it possible – or even feasible – to draw the line between offensive speech, abusive speech, and criminally prosecutable hateful speech? Why is it that online spaces are essential for social interaction and participation but they remain fundamentally unfriendly – and perhaps even unsafe – spaces for women and girls? What role do the platforms and social media sites play in dealing with abusive online behaviours? Is it time that the platform providers move beyond stereotypical attitudes, denials and fiascos, and consider sustainable and effective regulation? What should this regulation consist of? Is there a gap in responsibility between the platform providers' levels of responsibility, and the legal system intervention? How is the UK tackling this issue?

This paper will consider some of the prevalent issues surrounding social media interactions, with a particular emphasis on social media harassment, online hate speech, and forms of regulation before considering whether or not the legal system is doing enough to combat and address such issues. It will argue that the development of social media interactions is a significant feature of our online time, and that problems this has brought with it are not being adequately addressed by the regulatory mechanisms in the UK and the EU. This paper will consider the legal responses to high profile online hate incidents, and assess the role of the platform provider in resolving the issues, arguing that there is a responsibility gap. This paper will conclude that there is room for improvement in terms of the legal system dealing with these issues, especially from the perspectives of human rights, and internet regulation.

This paper will outline the current phenomenon of online abuse and online hate, and briefly outline the legal frameworks within the UK and EU, before considering the limits of current laws for the regulation of online hate speech. The paper will conclude by offering concrete suggestions on how to legislate and revise the relevant legal provisions, and offer some contemporary comment concerning the current reform agenda in the UK.

Introduction & Overview

“...things aren't great, Internet. Actually, scratch that: they're awful.”¹

Being a woman online is a dangerous thing. Being an active, outspoken woman online is almost treacherous, and being an active outspoken woman online with opinions that challenge conventional or majority opinion is akin to attracting death threats over breakfast. Yet, this is the reality of online interactions for millions of women every day. In many instances, there is no need to even be a high-profile woman online, being a woman with an online social media presence is simply enough.

This is the reality of the social media 'always on' era. It is a particularly pernicious phenomenon that sees women online being targeted – abusively, and with menace – for sharing opinions, or commenting on contemporary social occurrences. That said, while the issues facing women online are particularly prominent, and damaging because of the gender bias involved, online abuse, and online hate are issues affecting more than 40% of all adults.² Perhaps the most concerning of all though, is the fact that this behaviour is viewed differently depending on your gender – studies show that the perception of online abusive behaviour is viewed as a serious problem by 70% of women, compared to 54% of men.³ The percentage of women viewing this as a major issue, increases to 83% within the 18-29 age bracket⁴ – something that cannot be overlooked given that women in this group are the smartphone generation. Quite simply, when these statistics are considered, it is difficult to argue that there is not a significant problem with widespread online abusive behaviour.⁵

Other studies show that 6500 internet users are subjected to abusive behaviour online in a period of just three weeks, amounting to the posting of around 10 000 abusive tweets.⁶ These statistics are mirrored by the 2016 GirlGuiding Report which reported that over half of young women in the 11-21 age bracket consider sexism online to be far more of an issue, and, much more extreme than the sexism they encounter offline.⁷ Sexualised violence is a particular tool for the targeting of women online, and it is women that readily identify where they have been subjected to abuse because of their gender – the statistics from these reports highlight that

¹ WIRED, 'Open Letter to the Internet' (24 August 2016) <https://www.wired.com/2016/08/open-letter-to-the-internet/>.

² Bruce Drake, 'The darkest side of online harassment: Menacing behavior' Pew Research Center (1 June 2015) <https://www.pewresearch.org/fact-tank/2015/06/01/the-darkest-side-of-online-harassment-menacing-behavior/>.

³ Maeve Duggan, 'Men, women experience and view online harassment differently' Pew Research Center (14 July 2017) <https://www.pewresearch.org/fact-tank/2017/07/14/men-women-experience-and-view-online-harassment-differently/>.

⁴ Maeve Duggan, 'Men, women experience and view online harassment differently' Pew Research Center (14 July 2017) <https://www.pewresearch.org/fact-tank/2017/07/14/men-women-experience-and-view-online-harassment-differently/>.

⁵ K Barker, 'Online Misogyny, Hate Speech & Scotland: Two Steps Forward and 1 Step Back?' GSPR (2018) 108 (11).

⁶ DEMOS (2016) 'The use of misogynistic terms on Twitter' available at: <https://www.demos.co.uk/wp-content/uploads/2016/05/Misogyny-online.pdf>.

⁷ Girlguiding, 'Girls' Attitudes Survey 2016' 17-19, available at: <https://www.girlguiding.org.uk/globalassets/docs-and-resources/research-and-campaigns/girls-attitudes-survey-2016.pdf>.

this is not a trivial issue, and when the substance of the abusive and hateful tweets is considered, the impact is compounded still further.

This paper will outline key examples from within the UK that evidence the problematic nature of online hate speech, and especially online hate which has a gender motivation – referred to here as online violence against women (OVAW). This paper will outline these examples, critiquing the legal response, before outlining the current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 within which these examples arose. The paper will then outline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regulatory mechanisms before commenting on the numerous current reform proposals in the UK. Finally, this paper will offer concrete suggestions for reform to address not only online hate speech generally, but specifically gender-based online hate speech. This section will also consider non-legislative aspects, recognising that the law alone is not to blame for this societal challenge, but must play a leading role in tackling the systemic attitudes that allow it to flourish.

This is not a problem, nor a phenomenon that has a one-dimensional solution. While it would be nice to think that a simple change in the law could offer a solution, it must be borne in mind that the issue is one which stretches across cultures, generations, societies, hierarchies, and of course jurisdictions.⁸ It is also a challenge to the legal order, not least because of the difficulties in tracing and identifying the perpetrators of some of the abuse – these are added issues that are all part of the wider picture in dealing with OVAW, online hate, and hate speec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international treaty bodies all have a leading role to play in this arena, but so too do the platforms themselves which ultimately decide in their respective terms and conditions which behaviours they will permit on their platforms, and which abusive posts and comments they will continue to host. In essence, because of the privatised nature of the hosting platforms, in grappling with the issues of online abuse and online hate speech, there are risks attached that these spaces could become spaces of privatised censorship, and therefore, as with all legal and societal challenges, it is necessary to seek a balance.⁹ It is important too, to remember that simply because something is distasteful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it should be legally regulated, nor that it should be removed from the online platform. In reality, the law – at least in the UK – offers limited means of tackling online hate speech. It is therefore to the current situation that this paper turns next.

Current Situation: OVAW & Hate

“You were supposed to be the blossoming of a million voices. We were all going to democratize access to information together. But some of your users have taken that freedom as a license to victimize others. This is not fine... As you got bigger and stronger, more people wanted to talk—but some of them were jerks, or worse. Remember flame wars? You had no immune system, and you started to rot...”¹⁰

⁸ Kim Barker & Olga Jurasz, *Online Misogyny as a Hate Crime: A Challenge for Legal Regulation?* (Routledge, 2019) 59.

⁹ Kim Barker & Olga Jurasz, *Online Misogyny as a Hate Crime: A Challenge for Legal Regulation?* (Routledge, 2019) 98.

¹⁰ WIRED, ‘Open Letter to the Internet’ (24 August 2016) <https://www.wired.com/2016/08/open-letter-to-the-internet/>.

The Council of Europe indicated in 2016 that the problems facing women online are more systemic than just a handful of individuals taking issue with women posting online, and in fact the true nature of OVAW is entrenched in societal attitudes: “although it has taken a new dimension through the Internet, the root causes of sexist hate speech preceded the technology and are fundamentally linked to the persistent unequal power relations between women and men”.¹¹ Sadly, this statement is a reflection of the manner in which technology has become a facilitator for the suppression of women’s opinions, and the suppression of participation in our digital societies – something which is an emerging human rights issue, and which needs greater attention at international levels to reflect the steps taken by the United Nations, especially in highlighting particular countries where this is most serious.¹²

Within the UK, the problem – or challenge – posed by online expressions of hatred and violence are rife, with the most high-profile and voluminous examples featuring prominent and politically active women. Given the current volatile – and vitriolic – political situation within the UK post-2016, there has been an explosion in the prominence and volume of abusive, offensive, harmful, and illegal communications sent via social media platforms. To illustrate the scale and severity of the problem, the following examples exemplify the extreme abuse that women are subjected to online.

R v Nimmo & Sorley (2014) (unreported)

The first judicial consideration in the UK courts of hateful abuse communicated via the micro- blogging site Twitter, saw two individuals – both notorious trolls – sentenced to eight and ten week custodial sentences for issuing messages to Stella Creasy MP, and equality campaigner Caroline Criado-Perez. The reason these women had been subjected to death and rape threats, and abusive comments on Twitter? They had dared to campaign for a women – instead of a man – to appear on the new English bank note. In handing down custodial sentences, the judge, Riddle J, stated: “...the serious harm caused by the offending behaviour makes it inappropriate to impose anything other than an immediate custodial sentence...The harm caused is very high.”¹³ Whilst this decision ought to be applauded for giving custodial sentences for gender-motivated hate speech, it too fails to be satisfactory. The sentences issued were very short; the prosecution was *only* for the abusive messaging amounting to the charges being brought only for the misuse of a communications network, rather than charges being sought for the rape, and death threats. Sadly, *R v Nimmo & Sorley* leaves some significant room for improvement in tackling the problem. The case of *R v Viscount St Davids* is the second of the high-profile cases to attempt to deal with the problem of online gender-based violence (OGBV).

¹¹ Council of Europe, ‘Combating sexist hate speech’ (2016) 2 available at: <https://edoc.coe.int/en/gender-equality/6995-combating-sexist-hate-speech.html>.

¹² See for example: United Nations HRC ICCPR 4th Periodic Report (CCPR/C/KOR/CO/4) 2015 recommendation tha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needs to publicly indicate its intolerance of every form of discrimination, including that of hate speech (para 16), but see also UN CEDAW Committee 8th Periodic Report (CEDAW/O/KOR/CO/8) 2018 where CEDAW Committee recommended tha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dopt legal measures to prohibit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para 13).

¹³ *R v Nimmo & Sorley* (unreported) (2014), ‘Sentencing Comments’ per Howard Riddle, 24 January 2014. <https://www.judiciary.gov.uk/wp-content/uploads/JCO/Documents/Judgments/r-v-nimmo-and-sorley.pdf>

***R v Viscount St Davids* (2017) (unreported)**

The issue and actions in this case also concern the threatening and abusive behaviour of a prominent woman. In this example, the Viscount was convicted of racially abusing Gina Miller, who took the UK Government to court over the Brexit referendum. Not liking her actions, nor the result of her legal challenge, Viscount St Davids posted on Facebook a 'bounty' for the killing of Gina Miller, engaging in a racist tirade as he did so. This tirade was not only racist, but included gender-bias too, amounting to online hate speech. He was ultimately convicted of the misuse of a communications network, and sentenced to 12 weeks in custody by Senior District Judge (Chief Magistrate) Emma Arbuthnot.¹⁴ The prosecution here differs to that in *R v Nimmo & Sorley* because in *R v Viscount St Davids*, there was a clear racial element at play, and that, not the threat nor the abuse on the basis of gender, is the reason why there was an increased sentence of 12 weeks instead of the usual eight weeks, handed down. Irrespective of the change in sentencing duration here, it is still a derogatory signal in terms of how such abuses of women have been addressed by the judicial system when it comes to gender-based hate online. The third example – in the much more recent case of *R v Couch* (2019) – is more menacing but also targets politically prominent women in a more indirect but still harmful manner.

***R v Couch* (2019) (unreported)**

In this instance, again, online gender-based abuse was directed at a female member of parliament. Heidi Allen MP was the victim in this instance, where the defendant, Couch, sent two tweets and a Facebook post in January 2019 which – unlike in the previous cases – escalated events because alongside the threatening social media posts Couch included aerial photographs identifying the house of the victim. The perpetrator followed these posts with a direct email to Heidi Allen, in which he stated that people had been asking for her address but he had not – yet – given it out. In the sentencing remarks, District Judge Michael Snow highlighted the menacing nature of the communications which alluded to the knowledge of the address of this parliamentarian. Couch was convicted on two counts of an improper use of a communications network, and subsequently sentenced to 24 weeks in custody. The nature of the menace here was compounded by the defendant's military background, but the situation becomes more pronounced when the victim stated the impact that this incident has had on her – she has stopped running around her village, installed emergency lights, and installed panic buttons across her home. Whilst there is a lengthier sentence imposed in this example, the 24 weeks is still a short sentence for something as threatening and disturbing as revealing the private address and movements of a leading political figure. The judge, in sentencing, highlighted that threatening a parliamentarian was much more than an attack on an individual, and represented nothing but, "a profound attack on democracy." Consequently, in the opinion of the District Judge, the actions here merited nothing less than a period in custody.

In isolation, it may seem that this is a relatively trivial incident, but when this threat against a woman MP is considered in light of the murder of fellow MP, Jo Cox, in 2016 by Thomas Mair, it is not something to be dealt with offhandedly. In sum therefore, the situation here may not

¹⁴ *R v Viscount St Davids* (2017) (unreported) <https://www.judiciary.uk/wp-content/uploads/2017/07/r-v-lord-st-davids-20170714-sentencing-remarks.pdf>, 4.

amount to hate speech per se, as it does in the cases of *R v Nimmo & Sorley* and *R v Viscount St Davids*, but it does amount to online harassment, motivated by gender bias. The context – the Internet, social media, threats, and women – all indicate the problematic nature of firstly deviant social media use, and secondly, the ease of conveying menace online, especially when that menace is directed at women.

Online Hate: The UK Approach

There has been a plethora of debate concerning the scope of legal provisions dealing with online hate and how the criminal law – at least within the jurisdictions of the UK, and England & Wales – ought to address it. The issue has been a matter of consideration within the European Union too, with increasing attention falling on the social media platforms and online content albeit from the focus-point of online extremist and terrorist content.¹⁵ There is – understandably – a hierarchy of online priorities when it comes to regulating online platforms such as Twitter and Facebook, but the criminal law remains the dominant domestic force in dealing with hate speech, and particularly online hate speech, directed at women or not.

The most used legal provision when it comes to dealing with offensive and abusive communications in the UK does not relate to hate offences, but rather those of communications misuse. The Communications Act 2003 contains two separate but related offences within s127. Both of these can be utilised where there are menacing, or "grossly offensive"¹⁶ online communications posted. These provisions do not address hate and arguably impinge upon free expression rights, although it ought to be noted that the provisions contained within Article 10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stipulate that Article 10 rights are not an inviolable.¹⁷ That said, in considering provisions which could criminalise speech, s127 offences do not criminalise speech as a default position,¹⁸ rather s127 offences consider individual elements of speech which are regarded as problematic, and only deemed criminal by a conviction through the courts.

The s127 offences equally do not consider the prejudice nor bias which is present in the most abusive social media posts directed at women. Perhaps the biggest flaw in the s127 framework falls on the notion that in order to be prosecutable, the communication must have been grossly offensive rather than merely offensive or abusive. As such, this imposes an incredibly high legal threshold to be satisfied – one that has been highlighted as too stringent, and rarely achievable.¹⁹ It is conceivable that the level required to satisfy a prosecution is so high because of the potential censorship and free expression concerns, although there is no evidence to support such justifications – certainly not from the guidance notes attached to the Act itself.

¹⁵ See e.g. Commission Recommendation of 1.3.2018 on measures to effectively tackle illegal content online (C(2018) 1177 final) <https://ec.europa.eu/digital-single-market/en/news/commission-recommendation-measures-effectively-tackle-illegal-content-online>.

¹⁶ Communications Act 2003, s127(1)(a), s127(2)(a) and s127(2)(c).

¹⁷ Article 10(2)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¹⁸ Kim Barker & Olga Jurasz, *Online Misogyny as a Hate Crime: A Challenge for Legal Regulation?* (Routledge, 2019), 73.

¹⁹ Ms Marit Maij, Rapporteur of the Council of Europe Parliamentary Assembly Committee on Equality & Non-Discrimination, in her Report: 'Ending cyber-discrimination and online hate' Doc. 14217 (13 December 2016), para.32, available at: <http://bit.ly/2hX6mPA>.

The other main piece of legislation alongside the Communications Act is that of the Malicious Communications Act 1988. This Act – which predates the Internet and the social media eras – also contains two offences which can cover online abuse, albeit the focus is somewhat different. The focus of section one of the Malicious Communications Act is to address the sending of threats – something which happens with alarming regularity in the context of abuse targeting women online. For instance, all three of the case examples mentioned earlier *could* have seen additional charges raised under the Malicious Communications Act as well as the Communications Act – but this was resoundingly not what happened – largely because (presumably) the sentencing available under the Communications Act 2003 is now higher than that under the Malicious Communications Act 1988.

Beyond the communications misuse offences, other statutory provisions can be utilised when dealing with online hate, and online offensive communications. In dealing with threats, the Offences Against the Person Act (OAPA) 1861 could be used, especially where threats to kill have been made via social media. The problem here however is that the provision from 1861 was made without any conceivable notion that it would one day be considered in the context of electronic threats to kill. The provision has however been highlighted as another in which the context in which a threat is made is the key consideration.²⁰ If context is key, it is time this offence was deployed in dealing with online hate directed at women.

Similarly, the Public Order Act (POA) 1986 contains a multitude of offences that could all potentially address the online abuse and online hate seen to be directed at women. The three offences contained within this much amended legislation all tackle similar behaviours but attract different sentences. The behaviour in focus must involve the use of threatening or abusive or insulting words or behaviour.²¹ At the heart of these offences seems to rest the behaviour which is exactly what is happening to women online. The challenge with these offences, however, is that there is a need for someone to be in *sight* or *hearing* of the perpetrator who must intend to cause harassment, alarm, distress or anxiety.²² It is difficult to hear someone tweet abusively! Consequently, it seems unlikely that any of these offences can prevail when dealing with online hate speech.

Finally, the 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1997 offers slightly more hope for women subjected to online hate as it contains four different offences that cover behaviours equating to harassment, stalking, fear of violence to the person, and fear of violence amounting to serious alarm or distress. The difficulties with the use of the Protection from Harassment provisions are less pronounced than with the Offences Against the Person Act 1861 and the Public Order Act 1986 because telephone harassment,²³ and threatening voicemails²⁴ have both been considered under offences where threats are made. It is therefore not inconceivable that it should apply to pursue online abusive and threatening acts directed at women such as

²⁰ *Dhir v Saddler* [2017] EWHC 3155 QB; Kim Barker & Olga Jurasz, *Online Misogyny as a Hate Crime: A Challenge for Legal Regulation?* (Routledge, 2019) 49.

²¹ Public Order Act 1986, s4(1).

²² See further Kim Barker & Olga Jurasz, *Online Misogyny as a Hate Crime: A Challenge for Legal Regulation?* (Routledge, 2019) pp 38-80.

²³ *R v Ireland* [1997] 3 WLR 534.

²⁴ *R v Peter's (Juliet)* [2002] EWCA Crim 1271.

Heidi Allen MP. Sadly, no high-level judicial action has yet considered this Act in a social media and online hate case. It is something, which, is more baffling when the Courts in *Gough v DPP*²⁵ have specifically stated that insults can be abusive in the majority of instances. Why then, are more prosecutions not pursued under the more serious offences? It is in part attributable to the notion – voiced by the House of Lords – that: "... there are aspects of the current statute law which might appropriately be adjusted and certain gaps which might be filled. We are not however persuaded that it is necessary to create a new set of offences specifically for acts committed using the social media and other information technology..."²⁶

It is perhaps also attributable – at least in instances dealing with gender-motivated hate – to the absence of gender within the hate crime legislation in the UK. This lacuna essentially means that while you can be prosecuted – as Viscount St Davids was – for the misuse of a communications network, and that misuse was motivated by – for example – racial hatred, a higher sentence will be issued because racial hatred is a recognised and protected characteristic. On the other hand, no such higher tariff can be imposed because of gender. If therefore, Viscount St Davids had simply abused Gina Miller for being women – rather than a black woman – he would have received a sentence without an uplift. Under current UK law, there is no prosecutable hate crime on the basis of gender. It is impossible to be sentenced because your online speech was motivated by gender bias. This, as Barker & Jurasz point out, is hugely problematic, and reinforces structural inequalities. It also makes addressing online gender-based hate very difficult to tackle from a gender perspective. As such, there are a number of barriers to (1) tackling gender-based hate; (2) tackling online hate speech; and (3) making the Internet – and the ability to participate freely and fully – truly 'equal'.

Reform On the (Digital) Horizon?

Moving beyond the gaps in the communications and hate crime provisions in the UK, there are glimmers of hope on the horizon when it comes to tackling entrenched inequalities, and particularly the online hatred, and online abuse suffered by women. Given the prevalence and phenomenon of the problem – arguably now a digital epidemic – a suite of law reform proposals is under discussion from different perspectives.

Firstly, the hate crime frameworks are under reform in the jurisdictions of England & Wales, and Scotland. The agenda in Scotland is more advanced and more progressive²⁷ with the Scottish Law Commission and the Scottish Government ploughing ahead with plans to alter the grounds upon which hatred can arise. This includes the potential new offence of misogynistic harassment,²⁸ alongside the introduction of a gender aggravator²⁹ to allow – potentially – the

²⁵ *Gough v DPP* [2013] EWHC 3267 (Admin).

²⁶ *House of Lords Select Committee on Communications*, Paper 37 (2014-15), 9.

²⁷ K Barker, 'Online Misogyny, Hate Speech & Scotland: Two Steps Forward and 1 Step Back?' GSPR (2018) 108 (11).

²⁸ Scottish Government, 'One Scotland: Hate Has No Home Here Consultation on Amending Hate Crime Legislation' (November 2018) https://consult.gov.scot/hate-crime/consultation-on-scottish-hate-crime-legislation/user_uploads/sct08182935681.pdf, 13.

²⁹ Scottish Government, 'One Scotland: Hate Has No Home Here Consultation on Amending Hate Crime Legislation' (November 2018) https://consult.gov.scot/hate-crime/consultation-on-scottish-hate-crime-legislation/user_uploads/sct08182935681.pdf, 17.

incorporation of gender into the hate crime framework. This is very much a work in progress and whilst provides a unique opportunity, also poses some potential hurdles, not least in legally defining 'misogyny'.

Secondly, the Law Commission in England & Wales is about to embark upon its own review of the hate crime framework.³⁰ It too is considering changes to the protected characteristics which can amount to hate crimes. There are – as yet – no clear indicators as to the likely results of this review but it is the prediction of this author that changes to the hate crime provisions will be made to expand the characteristics which are enshrined and protected in the law.³¹ It is hoped this will include – for the first time – gender.

Thirdly, also shortly expected is the review of the Offensive Communications framework. This promises – should it progress – to be much more challenging because it requires thought be given to elements of internet regulation as well as communications. As explored here, the scale of the challenge is significant. No details are – as yet – available – but again, it is hoped that the review and consultation will move on from the holding position of the House of Lords in 2015,³² and will – at the very least – recognise that social media platforms need specific attention³³ and that the s127 Communications Act 2003 threshold must be lowered.

Beyond hate, and offensive communications, broader questions of internet regulation abound. This has recently been the subject of UK government consultation through the Online Harms White Paper.³⁴ This is the government's strategy for making the internet in the UK 'safer'. At its heart is the proposal of a statutory duty of care that could be imposed on social media – and other – platforms. The precise shape and form of such a duty has not been fleshed out yet – and raises some serious questions, not least of enforceability and consequences for non-compliance. It is a particularly contentious suggestion – and one which is not universally popular.³⁵ That said, the most likely duty of care model is presumably the notice & takedown model – albeit a statutory one. This is in effect, little other than the European Union requirement that operates for terrorist content online. As such, the Online Harms White Paper is something of a 'white elephant' in the room and is misleading – for the simple fact that its aim is really about restrictions on free expression by default and in advance of judicial decisions criminalising selected elements of speech. Whilst pre-emptive and preventative measures are understandable, they are arbitrary and directly contradictory to the ideals of a democratic and digital society. It is to be hoped that should this be the model under consideration, it will be stopped in its tracks.

³⁰ Law Commission, 'Law Commission review into hate crime announced' (18 October 2018) <https://www.lawcom.gov.uk/law-commission-review-into-hate-crime-announced/>.

³¹ Kim Barker & Olga Jurasz, 'Online misogyny as a hate crime: #TimesUp' Law Commission Hate Crime Conference, Oxford Brookes University, March 2019 (notes on file with author).

³² Kim Barker & Olga Jurasz, *Online Misogyny as a Hate Crime: A Challenge for Legal Regulation?* (Routledge, 2019) 125.

³³ *House of Lords Select Committee on Communications*, Paper 37 (2014-15), 9.

³⁴ DCMS, 'Online Harms White Paper' (8 April 2019) <https://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online-harms-white-paper>.

³⁵ See for example: Edina Harbinja, Mark Leiser & Kim Barker et al, 'BILETA Online Harms White Paper: Consultation Response' (May 2019) <http://bileta.ac.uk/Publications/>.

Conclusion:

Identifying behaviours online which are abusive, intimidatory, threatening, or hateful is the first step, but categorising and dealing with the harms and implications have proven to be incredibly difficult for the legal system but also for policing and judicial bodies. The problem however, is that there is really a clash of ideas between the users of these platforms – who increasingly regard them as spaces where the law should dictate what is allowed to happen – and the platform owners who are entirely private entities who set the rules and regulations of their own spaces. As Suzor indicates, "the legal reality is that social media platforms belong to the companies that create them, and they have almost absolute power over how they are run."³⁶ This creates an inevitable tension between regulators, users, and the platforms themselves. There is a clear push for regulation and control from the users, and in turn the regulators, which clashes with the role and interests of the platform owners who have created spaces which are in high demand and high use but which are public, and to which nobody can be compelled to sign up. This is the true crux of the issue when it comes to control and legislating – assuming legislation *is* possible, and achievable, the enforcement of the rules that legislation may introduce remains a distinct challenge, especially where the regulation will most likely be attempting to curb the operation of the platforms, which in turn will interfere with the business model of that private entity. To interfere in such a manner is obviously regarded as a threat by the platforms themselves, who regularly and consistently point out that using social media platforms is optional, and users can choose to deactivate their accounts and leave.

At this juncture, the situation returns to the idea of participatory spaces and inclusion – in today's digital society, it is almost impossible to fully participate without being engaged in some way through social media. As such, not participating – either at the insistence of the platform, or through choice because of the abuse and hate to which one could be subjected – is a non-option. The other corollary to this is that where there are individuals voicing hateful comments online through these privately run, optional spaces, this could potentially still amount to a criminal infraction, and as such, action ought to be taken by the policing bodies. After all, in the UK, if there were abuse occurring inside of the home, and this matter were reported, it would be fully investigated. The same cannot however, always be said to happen with online hate speech – yet.

³⁶ Nicolas P Suzor, *Lawless – The Secret Rules That Govern our Digital Lives* (CUP, 2019) 11.



UNIVERSITY of
STIRLING

온라인상의 혐오표현 및 여성 - 영국의 관점

Dr Kim Barker
스코틀랜드 스털링대학교 로스쿨

2019년 8월 서울

kimberley.barker@stir.ac.uk

BE THE DIFFERENCE

개요

1. 배경 및 개요
2. 영국의 현황
3. 사법 체계
4. 사법 개혁안 및 반응
5. 개혁 및 입법 관련 제안

UNIVERSITY of
STIRLING

BE THE DIFFERENCE

1. 배경 및 개요

- 소개
- 대표 사례

"... 인터넷이란 것은 좋지만은
않다.

정정한다. 사실 인터넷은
끔찍하다."

(WIRED, 2016)

UNIVERSITY of
STIRLING

BE THE DIFFERENCE

영국의 사례

- *R v Nimmo & Sorley* (2014)
- *R v Viscount St Davids* (2017)
- *R v Couch* (2019) (미 보고사례)
- *R v Thomas Mair* (November 2016)
- 영국 국회의원, 스코틀랜드 및 웨일즈 의회의원

UNIVERSITY of
STIRLING

BE THE DIFFERENCE